

당정청 “수사권 조정 · 자치경찰 · 국정원 개칭”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
검찰 직접수사, 6대 범죄 한정
검정간 수사 이견시 사전 협의
광역·기초 자치경찰 일원화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당정청협의를 갖고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및 검정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의 대외안보정보원 개편에 의견을 모으고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심도있게 점검했다”며 “권력기관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 제정속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법령개정 등 세부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 1차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산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 조 의장은 “야야 수출입 문제는 경제 범죄 중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 기관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 중 하나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패 및 공직자 범죄 주체인 주요 공직자 신분과 일부 경제 범죄 금액 기준에 대해서 법무부령에 뒤 수 사 대상을 제차 제한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직접수사의 구체적 범위는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재선등록 대상 자인 4급 이상 공무원, 부패범죄의 경우 뇌물액수 3000만원 이상, 경제범죄는 사기·배임 등 피해액 5억원 이상으로 한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로 마련된 수사준칙에선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검정이 중요한 수사 결과에 있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 의무화하고, 수사 기관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대검, 경찰청 또는 해경 사이 정기적인 수사 협의회를 두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심야 조사·장기간 조사 제한·변호인 조력권 보장 및 적법절차 보장 등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해 검·경 모두 적용되도록 했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되 별도 자치경찰

을 신설하는 종전의 이원화 모델이 아닌 광역·기초 단위 경찰조직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그간 제기된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며 “또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따르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한 결과”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임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해 시·도지사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임명하고, 상임위원도 한 명 제정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

가수사본부장이 각각 지휘감독하고 자치경찰은 관할지역 생활안전·교통·여성·아동·노약자·지역행사 경비 및 관련 수사사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부대표가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해 김 부대표는 “시·도지사가 업무적으로 책임지고 지원되되, 정치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게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후 법안 발의 및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발의하기로 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직무 범위상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 외부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및 집행 통제심의위원회 운용 등 내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계 등 불법행위시 형사처벌 강화 등이 담긴다고 조 의장은 전했다.

조 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 심의가 이뤄지게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법, 자치경찰제 관련법 등 관련 법안 발의 시점은 각각 달리하며,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김 부대표는 발의 시점에 대해 “법마다 다르다. (자치경찰제법의 경우)

국기경찰·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법률이 필텐데 가능하다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발의하려 한다”며 “국정원법도 늦지 않은 시점에 발의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아무래도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하고 여야간에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하는 시기가 남아있다”며 “내가 보기에 올(해) 정기국회 안에 빠른 시일 내 통과됐으면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정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에서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빠지게 됐다.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 부분이 검찰청법 8조, 장관의 정치적 중립 규정이나 또는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침해 논란이 있어서 이는 제외하도록 내부적으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개정 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검사의 1차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하고 검찰·경찰 관계를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을 처리했다. 다음 순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라며 “비례통합당은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야당류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뉴스1

이용호 의원 “2학기 대학 등록금 인하해야”

국회 이용호 의원은 30일 논평에서 9월초 대학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등록금 격차에 학생과 학부모의 근심이 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생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고 있으며, 그나마 비대면 수업으로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이 누려야 할 유무형의 혜택도 대폭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학들은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계속하겠다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이전과 똑같이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인하하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대학 당국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학재정을 충당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많게는 수천억씩 쌓아놓고 있는 대학 적립금을 쓰거나 재단전입금 확충으로 대학 재정을 늘리는 한편,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또한 대학 당국과 함께 2학기 등록금 인하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자녀 대학교육을 위해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 학부모의 한숨을 대학과 정부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이상직 도당위원장 출마 ‘우려’ 이스타 문제부터 정리해야”

민주 안규백 의원 “국민정서법·당원·국민 여론 참작해야”
도내 의원들 “합의 추대 사실과 달라… 본인 판단 기다려”
이상직 의원 “백의준군 할 것” 도당위원장 출마 포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스타 논란’ 당사자인 이상직(전주) 의원의 전북도당위원장 출마에 대해 우려를 전담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9일 이 의원의 전북도당위원장 출마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당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했지만 합의추대가 된 것은 아니었다”며 “이해찬 대표와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의견을 줘서 어제 전북도로 사인(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뉴시스에 “아마 후보에 대해서 오는 중에 결심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정서법이 있고 국민과 당원의 여론이 있으니까 참작해서 도내 의원들과 의견을 모은 다음에 (정리)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는 “당내 우려가 많다. 이스타 항공 사태가 복잡하네 이 의원이 다른 일을 하기도 그 문제부터 정리해야하는 것

이 아니라는 의견들이 있다”며 “그런 기류가 있으니 참고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북의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이 의원이 출마할 때 의견을 충분히 전했고, 당 지도부에서도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일 9일 전북도당 대의원대회가 늦춰질 수도 있다. 좀 시간을 갖고 이 의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타이밍”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의원도 “충분히 예견되는 사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뜻이 워낙 완강하니가 말리지 못한 것”이라며 “합의추대할 것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전북도당위원장에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이스타 항공이 파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참정주인 이 의원이 단독 출마해 사실상 합의추대되는 모양새에 대해 지역과 시민단체 사이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이에 이상직 의원은 30일 “백의준군 하자”며 전북도당위원장 출마를 포기했다. /뉴스1

‘2+2년 계약갱신 · 5%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한 날부터 시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 공포 후 3개월 이후

이른바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골자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

국회, 與 김현 野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 의결

국회는 30일 여야 추천 묶인 김현·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재석 294표 중 찬성 223표, 반대 58표, 기권 13표로 통과시켰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은 재석 294표 중 찬성 261표, 반대 25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추천뭉 방통위원으로 당대변인과 사무부총장을 지낸 김현 전 의원을 추천했다.

미래통합당은 야당 뭉 방통위원에 조선일보 출신으로 이명박(MB) 정부 정무수석을 역임한 김효재 전 의원을 추천했다.

국회는 여당 추천 허욱, 야당 추천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가 7월로 종료됨에 따라 각각 상임위원 1명씩을 추천했다.

차관급인 방통위 상임위원은 임기 3년을 수행한다. 이로써 5기 상임위원회는 한상혁 방통통신위원장을 비롯해 김창룡·안형환 위원에 이어 김현·김효재 위원 합류로 인선을 마무리하게 됐다. /뉴스1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30일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소재 이규창 씨의 멜론 농가 시설 하우스 비피해지역을 현장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복구와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지용 도의장, 호우피해지역 긴급 현장 점검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30일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완주 지역 멜론 재배 농가를 방문했다.

완주군 지역은 이날 도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수확을 앞둔 과일들이 물에 잠기는 비탄에 비닐하우스 시설 농가들의 피해가 컸다.

송 의장은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소재 이규창씨의 멜론 시설 농가 등 하우스 피해지역을 현장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피해복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87인, 찬성 180인, 기권 1인이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뉴스1

이씨는 “비닐 하우스 13개 동에서 1만5천여 개의 멜론모종을 심어 키워왔는데 긴 장마에 집중호우까지 겹쳐 농사를 망치게 됐다”며 “특히 출하를 앞둔 출하량 앞둔 상황에서 쏟아진 폭우로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져 평년보다 절반 이상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송지용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신속한 복구는 물론 추후 농산물 팔아주기 및 농수로 정비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국회 복지위, 감염병 예방·관리법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여야 합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 강화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안 4건(위원회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외국인에 대한 감염병 치료, 조사, 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을 외국인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고 이

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명시했다.

아울러 의사 판단에 따라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심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질병관리청장과 시·도 지사,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의 병상, 연수원 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스1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